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 변화

일제 말기(1937~1940)를 중심으로*

박용규**

(상지대학교 방송영상문화학과 교수)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내선일체론에 근거한 황민화 정책을 실시하고, 병참기지원에 기반하는 전쟁동원체제의 구축을 서둘렀다. 중일전쟁을 위해서는 조선인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황민화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황민화와 전쟁동원을 위해 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해야만 했다. 본 연구는 이런 일제의 지배정책을 다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실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전쟁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사실에서 두 신문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한 동안 일본은 부득이하게 동양의 평화를 위해 전쟁에 나섰다라고 주장했고, 일본군의 승전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938년 말 이후 두 신문은 중일전쟁은 동양을 서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고, 일본은 그 해방자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민화 정책과 관련해 두 신문은 초기에는 주로 신사참배나 궁성요배를 정당화하고 권유하는 논조를 보였을 뿐이다. 이후 두 신문 모두 지원병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절대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던 반면에 3차 조선교육령에 대해서는 조선어 교육의 폐지를 염려하며 소극적이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939년에 들어서서 두 신문 모두 '일본 정신'을 강조하며 내선일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전쟁동원 정책에 관한 사실에서 두 신문은 전쟁 직후 한 동안 자중을 요구하는 논조만을 보이다가, 곧 여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1939년에 들어서서 '일본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사실에서 나타났고, 1940년에 가서는 이제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동원체제를 강력히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논조는 일제의 강력한 언론통제와 신문사 내 경영진 및 언론인의 의식 전환이 모두 작용한 결과였고, 결국 두 신문이 일제의 지배방식에 순응해 독자들에게 내선일체와 전쟁협력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듣게 만들었다.

키워드 : 중일전쟁,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통제, 친일

* 이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ygpark@sangji.ac.kr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제하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김민환, 1994). 첫째는, 일제하의 두 신문을 ‘민족지’로 보고 민족운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관점이고, 둘째는 두 신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친일적 성향까지 보였다고 평가하는 입장이며, 셋째는, 두 신문이 당시의 상황 때문에 한편으로 타협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이었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 입장이다. 이렇듯 일제하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상당히 큰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제하의 두 신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신문의 논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거나, 또는 그 연구 대상 시기를 1920년대로 한정하고 있다. 즉, 1930년대 신문의 논조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에는 일제하의 두 신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했다.¹⁾ 최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일제하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성과의 부재로 인해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줄곧 언론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지배방식이 부분적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통제방식도 다소의 변화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일제는 1920년대에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표면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언론자유를 허용하는 듯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매우 강력한 언론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제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시 동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언론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이로 인해 신문들의 논조도 더욱 변질되어 갔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일제하의 활동에 대해

1) 1930년대 신문의 논조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을 한 것들로는 최민지(1978), 김민환(1994), 최영태(2004)의 연구가 있고, 일제 말기의 언론에 대한 연구로는 박용규(2001)를 들 수 있다.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의 논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 말기의 신문에 대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언론사 연구의 전반적인 부진 때문이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기존 연구들이 일제 말기의 시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친일의 상흔’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²⁾ 물론 일제 말기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비단 언론사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다른 분야의 역사 연구에서도 일제 말기의 시기는 대체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일부 분야에서 이런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학 분야에서 일제 말기의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었다(최유리, 1997; 변은진, 1998). 이런 연구들은 일제 말기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이하 황민화로 약칭) 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밝혀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문학사 분야에서 일제 말기의 작가나 작품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나왔다(김재용, 2002a; 하정일, 2003). 이런 연구들은 주로 친일문학의 성격과 친일담론의 내적 논리를 밝혀내려는 시도들을 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단순히 친일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친일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황민화 정책과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힘입어 1937년 이후부터 폐간까지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의 논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두 신문의 일제 말기의 사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그 안에 담긴 내적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듯 본 논문은 1937년 이후 두 신문의 사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일제 말기 《동아일보》와

2) 미야다는 일제 말기의 시기에 관한 연구가 “긴 공백의 기간을 가져야 했던 것은 그 상흔의 깊음, 이 문제의 무거움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미야다 세츠코, 1985, 1997, 158쪽).

《조선일보》의 논조의 특성과 그 배경을 밝히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두 신문의 일제하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을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시각

1) 친일의 논리와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

중일전쟁 발발 직전인 1936년 8월 총독으로 부임했던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조선 지배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선 전체를 ‘대륙전진병참기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조선 내부로부터 분출될 수 있는 저항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정신적인 면에서의 정지작업”이었다. 즉, “내선일체론은 대륙전진병참기지라는 군사적·경제적 요구에 입각한 현실론적 명제”였다(최유리, 1997, 9~34쪽). 일제는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등은 물론 1938년의 3차 조선교육령 개정,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의 실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1939년에 조선민사령 일부를 개정해 1940년 2월부터 시행한 창씨개명 등 각종 황민화 정책을 실시하며 내선일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다.

이러한 일제 말기의 황민화 정책과 그것이 조선인에게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던 연구자로는 우선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를 들 수 있다. 미야다(1985, 1997)는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기본방침으로 표방된 내선일체가 “조선사람을 더욱 완전한 일본사람으로 만들려는 지배자의 황민화 요구의 극한화(極限化)와 조선사람의 황민화 정도 사이의 모순·괴리 속에 탄생”했으며, 동시에 “그것은 한국 병합 이래 일본이 조선 지배의 기본방침으로 일관되게 채용해 온 동화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야다는 내선일체론은 일본인이 주장한 “동화

의 논리로서의 내선일체론과 조선인이 주장한 차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논리의 내선일체론이라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포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야다는 일부 조선 지식인이 전쟁을 통해 “압도적으로 보였던 일본의 국위” 앞에 독립에의 전망을 잃어버리고,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내선일체에 나섰던 “조선사람의 복잡하고도 굴절된 황민화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를 제기했다.

미야다의 이런 문제 제기는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일제 말기의 황민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황민화 정책의 내용 및 그 안에 담긴 내선일체의 논리를 밝히는 연구와 그런 황민화 정책이 조선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최유리(1997)는 징병제와 참정권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차별로부터의 탈출 논리로 내선일체론을 추종하던 많은 친일적인 조선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다시 일제에 의해 교묘하게 포장된 차별을 내선일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유포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은진(1998)은 일제 말기 조선민중의 현실 인식을 살펴봄에 “내선일체 논리에 입각한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시국인식”의 내용이 조선민중에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지식인, 관료·자본가·지주” 등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친일에 나섰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일부 지식인들이 내선일체론을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해 친일에 나서게 된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친일문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친일문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한 친일문학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즉, 이런 연구들은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의 소박한 이해를 넘어서서 친일문학의 계기와 논리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이런 변화는 친일문학 연구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자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친일문제를 순응이나 저항이냐는 이분법으로 단순화한 과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주의를 나름의 내적 논리

와 체계를 갖춘 헤게모니 담론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하정일, 2003, 19쪽).

김재용은 이런 연구가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재용(2002a)은 우선 친일문학을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작품의 집필, 친일적 사회단체 참여, 창씨개명 등을 기준으로 삼는 친일문학에 대한 소박한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동아 공영권의 전쟁동원과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라는 두 가지 입장을 글에 담아내면서 선전한 문학이 바로 친일문학”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김재용(2002b)은 친일문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내적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앞서의 논리를 더욱 구체화해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를 “내선일체의 황민화”와 “대동아공영론의 전쟁동원”이라고 정리하고, 전자는 중일전쟁에서 일제가 무한 3진을 함락시켰던 1938년 10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후자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9월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류보선(2003)은 친일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도 정작 친일문학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친일문학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전개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첫 단계로 “서구 중심의 근대성에 비판과 동양에의 관심”, 둘째 “동양의 중심으로서의 일본의 제시”, 셋째 “조선민족의 일본국민으로의 발전적 해소”를 들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논의는 “반역사적인 동시에 반민족적이므로” 친일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보선은 내선일체와 전쟁동원을 앞서서 주장했던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규정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크게 ‘철저일체론’과 ‘평행제휴론’으로 나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장용경, 2003, 238~245쪽). 즉,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일본인화”를 주장하는 경우와 내선일체론에 따른 “조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³⁾

3) 미야다는 내선일체를 제창한 조선인 사이에서 가장 논점이 갈라지는 부분인 “조선 고유의 것”을 어떻게 하며 내선일체에 나설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고 지

친일의 과정과 논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친일을 단순히 순응이나 또는 저항이나 하는 구도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조선인들이 중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일본의 압도적인 군사적 힘을 보며 독립에의 희망을 상실하고, 차라리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선일체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친일의 내적 논리였던 것이다. 또한 친일의 내적 논리는 구체적으로 서구 중심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동양에의 관심, 동양의 중심으로서의 일본의 제시, 조선민족의 일본국민으로의 발전적 해소 등의 단계로 나타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단순히 친일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친일의 과정과 논리를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와 연구 시각

본 연구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신문들이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해 어떤 논조를 보였는가를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중일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연구문제 2: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황민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가?

연구문제 3: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전쟁동원 정책에 관해 무엇을 주장했는가?

<연구문제 1>은 중일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다룬 사실에 대한 분석을

적했다(미야다 세츠코, 1985, 1997, 172~173쪽). 식민지 지배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던 녹기연맹은 1939년에 '평행제후론'과 '동화일체론'이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진, 2003, 290~292쪽).

통해 전쟁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일본 중심주의를 주장했는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일제 말기의 지배정책, 즉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며 황민화를 강행하고, 병참기지론에 입각해 전쟁협력을 강요하던 정책에 대해 두 신문이 어떤 논조를 보였는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중일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하는 문제는 황민화 정책이나 전쟁 동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일제 말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조의 특성과 그 안에 내재된 논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 7일부터 폐간된 1940년 8월 10일까지의 두 신문의 사설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두 신문의 입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연구 대상 시기의 전체 신문사설 중 각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설들을 선택해 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분석을 위해 친일의 계기와 논리에 대해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친일의 계기와 관련해서는 ‘저항’과 ‘협력’에 대한 결정이 단순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강제와 유인이 어느 정도 결합된 형태로 저항과 협력의 문제를 결정했을 것이다. 특히 ‘유인된 자발성’이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유력한 경로였다고 보아야 한다(김승환, 2004, 434~435쪽). 다만 유인이 “동의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포섭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하정일, 2003, 25~29쪽). 결국 폭력을 이용한 강제와 자발적 인식전환이 친일로 들어서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때로는 ‘권력욕’이 작용하기도 했다.⁴⁾

조선인들을 친일로 유인했던 대표적 논리는 “서구의 근대를 모방한 일본

4) ‘권력욕’은 “자신이 속한 분야·단체의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종교·문예 단체에서 나타났다(이중연, 2003, 51~80쪽). 물론 ‘권력욕’과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던 욕구들도 때로는 친일의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의 근대를 다시 닦고자 염원”했던 내선일체의 이념이었다(노영무, 2002, 455쪽). 물론 식민주의의 근대화 계획이 일차적으로 조선인을 유인하는 데 기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Shin & Robinson, 1998). 일제 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동양주의”에 매료되어 반서구, 인종주의적 투쟁을 정당화하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입장도 결국은 “변형화된 근대화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한도현·김재용, 2003, 36~48쪽). 이들에게 중일전쟁은 “봉건에 대한 근대의 승리”이며 동시에 “동양의 서구에 대한 승리”이기도 했다. 즉, 근대이든 근대의 초극으로서의 동양주의이든 일본 중심주의의 자장 안에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일제가 만들어낸 “질서지어지는 위계를 전제로 하는 동일화의 수사학”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김성경, 2004, 127~128쪽).

한 개인이 생산하는 문학담론과 관련된 저항과 협력에 관한 논리를 미디어 담론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미디어 담론은 “미디어와 수용자를 연결하는 사회 담론”의 하나이기 때문이다(Bell & Garrett, 1998, 2004, 27~83). 즉,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압력과 요구, 미디어 조직, 언론인의 개인적인 차원 모두를 아울러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제 말기의 신문들은 더욱 강력해진 일제의 언론통제와 조선인 독자들의 민족적 욕구 사이에서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신문이 친일 논조를 보였던 것이 전적으로 강제의 결과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신문사의 조직적 의사결정의 산물이며 곧 언론인들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며 신문사설에 나타난 친일 논조의 내적 논리를 밝히고, 그것이 지닌 언론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 중일전쟁 발발 직후 《조선일보》 내부에서 친일적인 논조의 전환이 독자들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京城鐘路警察署, 1938, 9~10쪽).

3. 일제 말기 신문들의 논조

1) 전쟁의 성격과 목적

중일전쟁 발발 직후 한동안 국민들의 자중을 요구하는 논조만 보이던 신문들은 곧 전쟁의 성격을 왜곡하는 데 나섰다. 《동아일보》는 “황군은 드디어 화평해결의 희망을 방기하고 전단(戰端)을 개시했다… 동아의 평화는 국민일체로 회구하는 바이지마는 지나의 태도가 저리한 한 어디까지 저를 각성시키는 것은 국가적 신념”이라고 주장했다(1937. 8. 20). 《조선일보》도 “지나의 영토에 대하여는 척십(尺十)도 제국의 욕(欲)하는 바가 아니다. 요는 피(彼)의 반성을 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1937. 8. 23). 전쟁의 성격을 처음으로 언급한 두 신문의 사설의 내용은 전쟁의 일차적인 책임은 중국에 있고, 일본은 동아의 평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논조는 일제의 선전정책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⁶⁾ 이후에도 사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신문은 일본의 승전 소식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북방전선의 황군은 문자 그대로 승리에 승리, 또 전진의 도를 가하고 있는 지라 이로써 미루어 생각하면 중지(中支) 전선에 있어서의 승리의 쾌보도 멀지 아니하여 접하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전 일본국민을 환희시키지 않을 수 있으리오.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할 것을 축하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의 상정인지라 오늘날까지 침묵했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奇異)의 감을 줄 정도이다(《동아일보》,

6) 일제는 1937년 7월 17일 “지나사변에 대한 선전방책”을 결정했는데(변은진, 1998, 35~36쪽), 그 내용은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중일전쟁 보도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위의 선전방책에 나와 있고 두 신문의 사설에 그대로 반영된, 중일전쟁이 “동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애써 합리화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김재용, 2002b, 61쪽). 이렇듯 일제는 전쟁 발발 후 보도 내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제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책도 실시했던 것이다.

1937년 10월 17일자).

뒤 이어 《동아일보》는 황군이 “간난과 모험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상해를 점령했으며(1937. 10. 30), “용맹 과감한 진격으로 말미암아” 남경이 함락되었다고 표현했다(1937. 12. 12). 《조선일보》도 남경 점령에 대해 “충용한 황군 장병” 덕택으로 “세계 전사상에 희유(稀有)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1937. 12. 12). 중국의 수도였던 남경 함락에 관해 《동아일보》는 3번, 《조선일보》는 2번씩이나 사설로 다루었다. 이후 두 신문은 승전 소식이 있을 때마다 사설로 다루며 그 의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논조를 보였다.⁷⁾

중일전쟁 발발 직후 한 동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은 위와 같이 중일전쟁에 대해 두 가지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중일전쟁이 일본으로서의 동양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은 전쟁에서 우월한 군사력으로 압승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조는 황민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전쟁에 대한 조선인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1938년에 들어서서는 중일전쟁에 대해 “동아평화를 확립하려는 성전(聖戰)”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38년 4월 26일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두 신문은 중국을 지원하는 나라들을 비판하는 사설들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금번 사변은 대일 항전의 실력이 없는 장정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제3국, 영불소(英佛蘇)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938. 6. 25). 《조선일보》도 “지나라는 곳은 소련의 공산주의와 영국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쟁장”이며 “단호 퇴치하여야 할 대사명 하에 성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7) 1938년 이후 승전 소식을 다룬 사설로는 《동아일보》의 “서주 함락”(1938. 5. 21), “광둥시 입성”(1938. 10. 23), “한구 함락”(1938. 10. 27), “해남도 공략”(1939. 2. 12), 《조선일보》의 “서주 점령”(1938. 5. 20), “광둥 함락”(1938. 10. 23), “무한 돌입”(1938. 10. 27), “무한 3진 완전 함락”(1938. 10. 29), “해남도 점거의 의미”(1939. 2. 13) 등을 들 수 있다.

(1938. 10. 2). 이 같은 경향은 “동양의 마드리드”라고 불리던 무한 3진의 함락 후 더욱 강화되었다.⁸⁾ 《조선일보》는 무한 3진 함락의 의의를 “첫째 구미 의존 지나인에게 동양인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며, 둘째는 그 결과 동양을 동양인의 세력권 내로 환원코자 하는 제국의 이상이 점차 현실의 단계에 오르는 것”이라고 요약했다(1938. 10. 19). 《동아일보》도 “외국의 원장(援蔣) 정책에도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영불소의 정책 변화를 예상했다(1938. 10. 27).

《조선일보》는 이제 전쟁의 목적을 동양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신 질서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1938. 11. 4), 이미 1937년 11월에 독일, 이탈리아와 방공(防共) 협정을 맺었던 일본이 “방공의 두 맹방과 힘을 합하여 대업의 유지유종을 위하여 일층 분발치 않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938. 12. 22). 무한 3진 함락 이후 《동아일보》에 비해 《조선일보》는 훨씬 적극적인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다.⁹⁾ 《조선일보》는 나아가 “독일, 우(又)는 이태리, 일본의 취해 온 온갖 행동은 모두 합리화되고 실재화했으니 세계는 정(正)히 신질서 건설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939. 3. 18). 이렇듯 방공협정을 맺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중국 정부를 돕던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8) 김재용은 1938년 10월의 무한 3진 함락이 조선의 지식인들을 친일로 들어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상해, 남경에 이어 무한 3진마저 일본에게 무너지고 중국국민당이 중경으로 이동하자, 일본에 항거하는 중국의 노력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는 일본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2002b, 58~61쪽). 또한 1938년의 ‘동우회 사건’과 ‘홍업구락부 사건’도 조선의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서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이중연, 2003, 56~62쪽). 이런 요인들이 언론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논조의 변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38년 4월에 공포되어 5월부터는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던 국가총동원법도 이미 언론의 논조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李鍊, 2002, 388~391쪽).

9) 총독부는 황민화 정책 등에 대해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루었고, “미국이 세계의 경시총감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7~16쪽). 실제로 《동아일보》는 사실에서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 지도국”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1938. 11. 19).

는 주장이 이후에도 사설에서 자주 나타났다.

1939년에 두 신문 모두 천황 생일인 천장절을 사설에서 다루었는데,¹⁰⁾ 《동아일보》는 “전세계로 하여금 경이케 하는 전과는 천황 폐하의 어능위(御稜威)의 소연(所然)”이라고 표현했고(1939. 4. 29), 《조선일보》도 “제일선의 혁혁한 무훈과 현양되는 국위도 다 이 어능위의 소사(所賜)”라고 주장했다(1939. 4. 29). 이런 사설들은 중일전쟁의 전과를 천황의 덕택이라고 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유포를 의도하는 것이었다(변은진, 1998, 236~238쪽). 《조선일보》는 이제 중일전쟁을 서구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성전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금번 사변의 목적은 정부의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나로부터 항일용공을 일삼는 장개석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고 지나로 하여금 영불미의 반식민지적 박반(縛絆)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동아 신질서를 건설함으로써 일지 양국민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결합을 완전히 하여 동양의 영구적 평화를 확립하려는데 있는 바로 금번 성전의 진목적은 파괴에 있지 않고 그 반대인 건설에 있다(《조선일보》, 1939년 7월 7일자).

이제 중일전쟁은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서구로부터 동양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고, 일본은 그 해방자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1940년에 들어서서 《동아일보》는 “황국 일본은 실로 이 탈취된 아세아의 천지를 그들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전 아세아를 문화의 성지가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40. 2. 11), 《조선일보》는 “장개석 정권의 뒤에 숨어 지나를 지배하고 동양을 백인의 철제(鐵蹄)하에” 두려는 “백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동양의 신질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40. 3. 10).

10) 1938년에는 《조선일보》만 천장절을 사설에서 다루었지만, 1939년과 1940년에는 두 신문 모두 천장절을 사설로 다루었다. 1938년에 《조선일보》는 천장절을 사설에서 다루면서 천황 부부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1939년에 《조선일보》는 사진 없이 간단히 다루었지만, 오히려 《동아일보》는 1938년의 《조선일보》처럼 천황 부부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제 인종주의적 대립을 내세우는 주장까지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¹¹⁾

1940년 3월에 국민당 정부로부터 이탈한 왕정위를 내세워 신남경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런 논조는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¹²⁾ 《조선일보》는 신남경정부의 수립에 대해 “전동아민족이 백색 제국주의의 박박(縛縛)에서 해방되는 여명은 왔다”고 표현했고(1940. 3. 30), “동양에서도 문로주의를 실행하려면 미국이든지 또는 어떤 국가에서도 그 주의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하지 못하게 할 실행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940. 7. 12). 《동아일보》도 “동아의 맹주”로서 일본이 “동아의 천지를 아들의 수(手)로서 수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1940. 7. 3).

한편 두 신문은 일본이 서구로부터 동양을 해방시켜 동양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영불은 물론이고 미소까지 중국 정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극동의 자주원칙, 즉 동아신질서건설운동의 전도가 얼마나 용이치 않은가는 상상기에 불난(不難)한 바”라고 하며 그 어려움을 강조했다(1940. 7. 7). 《조선일보》도 “제국이 동아의 맹주로서 세기적 위업인 그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한 지 3년이 된 날을 맞아 “국민은 이 중대시기에 처하여 금후 더욱 더 긴장 일억일십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40. 7. 7). 두 신문은 서구에 맞서 동양을 해방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조선인들을 계속 전쟁에 협력하도록 만들려는 논조를 보였던 것이다.

11) 전쟁 직후 이미 《조선일보》는 “만약 극동에서 대전이 발발하면 전쟁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황인종의 정치적 지반의 전멸에 의하여 전동양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화 될 수 있으므로 백인종의 세계적 지배는 확호불발(確乎不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1937. 7. 26).

12) 김재용은 친일 파시즘 문학의 두 계기로 무한 3진 함락과 신남경정부 수립을 들었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이 신남경정부 수립을 “국민당의 핵심 인물이 일본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기꺼이 받아들여려고” 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2003, 398~399쪽).

2) 황민화 정책의 실시

일제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내선일체론에 근거한 황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신사참배는 이미 만주 사변 직후부터 강요되어 왔던 일로서,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실시되었다.¹³⁾ 전쟁 발발 2달 뒤 쯤 《동아일보》는 조선신궁에서 개최된 기원제 행사를 사설로 다루었고(1937. 9. 4), “애국일” 제정을 맞아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학교에서는 동방 요배식을 거행한 것을 들어 “실로 애국일에 맞는 성대하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1937. 9. 7). 1937년 11월에 《동아일보》는 “국민정신자흥” 주간을 다룬 사설에서 그 행사 중 하나인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일상 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1937. 11. 7).

《조선일보》는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해 폐교가 결정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어차피 “폐교의 운명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하며 일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937. 9. 14). 또한 뒤에도 《조선일보》는 다시 “원래 당국에서는 신사참배를 종교적 신앙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국민이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 위하는 조상숭배요 위인숭배로 본다. 그러므로 총독부에서 사무를 취급할 때에도 종교에 관한 사무는 사회교육과에서 취급하고 신사에 관한 사무는 지방과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신사참배 강요를 정당화하기도 했다(1938. 6. 5).

1937년 말부터 일제는 조선교육령 개정과 지원병 제도의 도입을 계획했다. 3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학제를 통일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황민화 교육을 실시하고 조선어를 폐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교육령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이미 일제는 일본어 한자와 조선어 한자를 모두 배우는 것이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조선어 한자 교육의

13)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 이후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도 신사참배 강요가 이루어졌다. 이런 일제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로 여러 곳에서 갈등이 빚어지다가, 결국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기독교 학교의 폐교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김승태, 2000).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두 신문은 조선어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조선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조선어 한자 폐지는 그대로 시행되었다.¹⁴⁾

3차 조선교육령 논의 과정에서 조선어과 폐지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신문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내용에 있어서 교육과목의 통일쇄신은 원칙적으로는 물론 좋은 일이나 이 원칙의 적용이 공학에 있어서의 조선어과의 폐지와 같은 일을 혹시 결과하게 된다면 이 점만은 오인의 크게 반대하는 바”라고 주장했다(1937. 10. 24). 《조선일보》도 “초등, 중등교 공학설에는 절대로 반대하거나와 조선어 확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언명한 당국이니 만치 공학설은 전연 무근한 풍설일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1937. 10. 24). 얼마 뒤 조선어를 수의(선택) 과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알려지자 《동아일보》는 “조선어과의 폐지 운운은 이미 논급한 일이 있는바 같이 조선의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불가함을 재언을 요치 않는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1937. 11. 10). 《조선일보》도 조선어 선택이 줄어들면 “조선어에 대한 조선인의 지식이 점점 더 알아지고 따라서 조선문화의 향상에도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1937. 11. 11).

소학교를 제외하고는 조선어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확정되어가자 《동아일보》는 다시 “당국자가 통일과 획일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조선어과를 조선인 학생에게나 일본 내지인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교수치 않는 일은 없을 줄로 믿”는다는 입장을 보였다(1938. 2. 27). 《조선일보》도 “조선인을 내지인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시키고자 함에 있어서는 만강(滿腔)의 사의를 표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선인이 배울 특수적 교과목과 조선인이 누릴 시설을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1938. 2. 24). 《조선일보》는 1938년 3월 3일 3차 조선교육령 공포된 이

14) 이와 관련된 사실로는 《동아일보》의 “조선식 한문의 폐지”(1937. 9. 1), 《조선일보》의 “조선어 한문과 폐지”(1937. 8. 31)와 “한문과 폐지와 그 선후책”(1937. 10. 6)을 들 수 있다.

후에도 다시 “당국의 국어보급정책상 국어를 치중하는 점이나 교육제도를 획일화하려 하는 점”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가정이나 사회생활상 잠시라도 불가결한 상용어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938. 3. 5).

두 신문은 일본어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현실을 감안해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일제는 바로 일본어 해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어 교육의 폐지를 추진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부 소학교에서도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자, “조선어과의 수의과 문제는 자칫하면 민족의 식문제나 또는 그 유사문제로 곡해되기” 쉽기 때문에 거론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단지 “현실 조선의 특수사정을 참작”해 소학교만이라도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밝혔다(1938. 10. 3). 또한 《조선일보》는 “조선인이 전부 국어를 말하고 서(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지니 그 이전에 교과서를 통일한다면 국어에 서투른 조선 아동은 자연 양호한 성적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938. 12. 4). 그러나 두 신문은 모두 조선어 교육 폐지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¹⁵⁾

원래 문명된 국민에겐 세 가지 의무, 즉 조세, 병역,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노노(嗚嗚)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정 당국자는 이 세 가지 의무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이 이 의무를 완전히 수행함으로써 줄 바의 권리를 줄 것이요 그리하여 완전한 국민이 되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며 또한 국민으로 말할지라도 그 국민적 자격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그 의무 수행을 각오할 바이다(《동아일보》, 1938년 1월 19일자).

15) 일제로서는 조선인을 병력자원화 하기 위해 일본어 해독능력의 확대가 절실했고, 그런 이유도 작용한 결과로 조선어 교육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최유리, 1997, 158~159쪽).

《동아일보》의 논조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완전한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차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논리로서 내선일체론을 주장한 것이었다. 《조선일보》도 “이제 조선인에게도 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획시적 중대문제로 내선일체의 일 현현(現顯)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938. 1. 18). 다시 두 신문은 지원병 제도를 “조선민중도 나서 중대임무”를 지게 된 것이며(《동아일보》, 1938년 4월 3일자),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 1938년 4월 3일자). 훈련소 개소식을 앞두고 지원병 제도에 대해 다시 《동아일보》는 “조선통치 수뇌부의 영단(英斷)의 소산”이라고 표현했고(1938. 6. 15), 《조선일보》는 “황국신민된 사람으로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938. 6. 15).

이렇듯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지원병 제도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조선어 교육 폐지에는 반대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신문이 민족의식 때문에 조선어 교육 폐지를 반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차적으로는 조선어 신문으로서의 자신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이고,¹⁶⁾ 또한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의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⁷⁾ 어쨌든 뒤에도 “조선은 찬란한 수 천년의 문화를 가졌다”거나(《동아일보》, 1938년 6월 12일자), “오늘 날 조선에 있어서는 한편 조선어의 보급이 일대필요사가 되어 있어 정확한 조선어의 지식에 대한 요구가 일층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도 있었다(《동아일보》, 1938년 7월 13일자). 또한 “조선은 장구한 문화를 말하고 또 오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세계 무비(無比)의 조선문자를 자랑”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조선일

16) 일제는 일본어 해독 인구의 증가가 조선인 발행 신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40, 28~30쪽). 그러나 제한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판매 시장에서 일본어 해독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곧 조선어 신문의 독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 ‘문화적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로빈슨(Robinson, 1988, 1990)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보», 1938년 7월 13일자).

무한 3진 함락 이후인 1939년에 들어서서 조선어 교육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¹⁸⁾ 이제 ‘일본 정신’을 강조하며 내선일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사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신무천황의 어(御)창업을 추봉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정신 천명을 중심으로 국체의 존엄, 이상, 일본 문화, 내선일체의 정신 발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39. 2. 8).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의 존엄한 국체, 광원(宏遠)한 제국의 이상, 일본 문화의 발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39. 2. 8). 이러한 사설들에는 먼저 “일본 고유의 민족정신”을 극찬하는 장황한 설명이 앞세워졌다.

무릇 일본 정신은 저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개인주의와도 다르고 전체가 있는 후 개체가 있다는 파썸과도 다르다. 일본 정신은 일본 독특한 국민성, 국민 기질에 의한 것으로서 타의 모방 우(又)는 추수를 불허하는 바니 내선일체, 일만재(日滿支) 협조 등은 다 서양류의 식민지 사상과 다르다. 학제 개혁, 지원병 제도의 실시는 그 표현의 일례라 할 것이다(《조선일보》, 1939년 2월 11일자).

《조선일보》는 뒤 이어 “학제의 통일, 지원병 제도의 실시 등은 아직 시험기에 지나지 못하나 내선일체, 상언(詳言)하면 조선의 내지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내지 연장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내선일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1939. 5. 8). 《동아일보》도 “내선일체의 구현으로서 사변 목적 달성에 비위(非違)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며 내선일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939. 7. 7).

그러나 이렇듯 내선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던¹⁹⁾ 두 신문은 창씨개명을

18) 1939년 이후 조선어 교육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경우는 없고, 단지 《조선일보》가 경성제대의 조선문학 강좌 존폐가 논란이 되자, “조선문학이나 조선어의 필요를 말함으로써 민족적 편견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미 조선어와 일본어의 어원 연구를 통해 내선동근, 내선일체의 학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편견과 오해에 패념할 바”가 없다고 하며 조선문학 강좌의 존속을 주장한 사실 정도가 있을 뿐이다(1939. 2. 9).

포함하고 있던 조선민사령 개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만이 조선민사령이 “내선일체의 진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의 자문기관으로 항상 당국의 시정에 찬의를 표하는 중추원 회의에서조차 이 신제도를 반대한 것은 주목할 현상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1939. 11. 10),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예 조선민사령을 다루지 않았다.²⁰⁾ 이것은 조선인들의 반발이 매우 크고 아직 강제성이 덜 하던 초기 단계에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40년에 두 신문은 모두 기원절과 천장절을 사설에서 다루면서 이른바 “일본정신”을 기리고 천황을 찬양하는 논조를 보였는데, 이 같은 논조는 내선일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두 신문은 교육이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차별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선의 민도가 아무리 저열하다 한들 저 명치유신 때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 어찌 정곡을 얻었다 하랴”라고 하며 차별 철폐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서둘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1940. 3. 20). 《조선일보》도 “인구가 내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선에 그 학교 수의 10분의 1인 2백7십 교쯤만이라도 급속히 설립하라 하는 것이 내선일체가 진행되는 급일 어찌 과분한 요구랴”라고 하며 학교 증설을 요구하기도 했다(1940. 2. 17). 또 《조선일보》는 “민도의 낮은 것을 이유로 장차 실시할 것을 언명”한 참정권의 확대가 “단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940. 2. 26). 이제 두 신문은 철저히 내선일체의 실현에 앞장서며, 아주 간혹 소극적으로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19) 경무국 도서과는 1939년 6월에 지시한 “편집에 관한 희망 및 주의사항”에서 내선일체에 관한 기사를 “성의를 가지고” 다루고 양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최준, 1993, 281~283쪽).

20) 일제도 두 신문이 창씨개명에 대해 “당초에는 계재를 기피하고 싫어”했다고 평가했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7~16쪽). 경무국 보안과 촉탁으로 활동하던 조선인이 1939년 11월 18일에 창씨개명에 관한 ‘민심동향’을 조사해 보고한 자료에도 두 신문의 이런 태도로 인해 “용이하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주수, 2003, 96~98쪽).

3) 전쟁 동원체제의 구축

두 신문이 모두 중일전쟁을 사설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937년 7월 16일이었다. 《동아일보》는 “때는 바야흐로 비상시인지라 이런 시국이던 시국일수록 우리의 행동이 자중스럽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며 유언비어 유포를 경계했다(1937. 7. 16). 《조선일보》도 “비상시에 제하여 가장 무서운 것은 유언비어다. 그 일 사회에 끼치는 해독은 대개 막대한 바가 있다”고 유언비어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937. 7. 16). 이후에도 7월과 8월 사이에 《동아일보》는 4번, 《조선일보》는 3번이나 더 유언비어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했다.²¹⁾ 실제로 중일전쟁 발발 직후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었고, 일제는 이를 단속하기에 혈안이 되었었다고 한다(미야다 세츠코, 1985, 1997, 5~8쪽).

자중을 요구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 두 신문은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을 촉구하는 사설들을 실기 시작했다. 먼저 《조선일보》는 “총후(銃後)에 선 일반 국민의 정신, 물질 양방면”의 후원이 필요하고(1937. 8. 2), “견인 지구(堅引持久)의 정신과 거국일치의 관념을 가지고 제반 사업의 진전을 도(助)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1937. 8. 23). 《동아일보》도 “총후 후원에 성의를 다하여 써 거국일치의 실적을 유루(遺漏)없이 내지 않으면 아니” 되고(1937. 8. 20), 또한 “거국일치적 성의로 당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37. 8. 22). 거국일치하고 견인지구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이후에도 매우 자주 나타났다. 또한 《조선일보》는 “국가의 대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치 아니하는 자는 이것을 비국민으로, 즉 차를 환언하면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전쟁에 대한 절대적인 협조를 강요하기도 했고,²²⁾ 《동아일보》는 아래와 같이 일

21) 《동아일보》의 경우 “비상시국과 일상생활”(1937. 7. 22), “유언비어의 사회적 영향”(1937. 7. 27), “전시체제하 우리의 태도”(1937. 7. 31), “말을 삼가라”(1937. 8. 8) 등 4번, 《조선일보》의 경우 “시국과 그 인식”(1937. 7. 22), “전시체제 들어서의 각오”(1937. 7. 30), “유언비어의 엄중 취제”(1937. 8. 9) 등 3번이다.
22) “현대전의 특징”(1937. 8. 14)이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서춘이 쓴 것이라고 한

본에 대한 애국심까지 요구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기본조건은 국민의 애국심일 것이다. 국민의 애국심이 언제나 발로되고 있으면 그 나라는 언제나 흥하고 성하는 것이며 일시라도 마비되고 있으면 그 때의 그 나라는 쇠하고 망하는 것이다. ...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업을 구별할 것 없이 전조선적으로 타오르는 애국의 열정은 이 국가중대의 추(秋)에 당연한 발로라 하겠지마는 그래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바이다(《동아일보》, 1937년 9월 7일자).

두 신문은 곧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전쟁으로 인한 증세를 “요컨대 본 세(稅)는 세계에 투입된 거국일치의 표현”이라고 했고(1937. 8. 13), 《동아일보》도 “이 비상시국에 있어서 국민생활은 최저수준까지 인내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937. 9. 10). 특히 총독의 유고(諭告)에서 이른바 ‘생업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자 신문들도 곧 이를 다루어, “완전한 거국일치적 견지 하에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유형·무형 등의 일절 역량이 동원”되어야 하고(《동아일보》, 1937년 9월 23일자), “농어산민으로 이 중대시국에 제하여 황국에 보답하는 방도는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오직 생산보국의 네 자의 실행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37년 9월 23일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의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두 신문은 1937년 10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었던 ‘국민정신총동원운동’부터 시작해 전쟁협력을 촉구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그대로 사설로 다루었다.

지원병제의 실시에 관한 사설은 두 신문의 전쟁협력에 대한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난 예중 하나였다. 《동아일보》는 “이 제도를 더욱 확충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장래에 일반 징병제에까지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京城鐘路警察署, 1938, 22쪽). 이 문서에 따르면 서춘은 중일전쟁 초기 《조선일보》의 친일 논조를 주도하다 사내의 반발로 10월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38. 1. 19). 《조선일보》는 “장래 국가의 간성(干城)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竭忠盡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臣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938. 6. 15). 이렇듯 두 신문은 징병제 실시를 요구하고, 국방상 완전한 신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쟁 협력을 촉구했던 것이다.

일제는 1938년에 들어서서 소비절약, 저축장려, 생활쇄신 등을 강조하며 4월에는 ‘총후보국 강조주간’을 실시했고, 6월에는 ‘물자동원계획’을 발표했고, 8월에는 ‘경제전 강조주간’을 실시했다. 그 때마다 두 신문은 관련 내용을 사설로 다루어 국민들의 협력을 요구했다.²³⁾ 《동아일보》는 “경제전을 강화함에는 정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국민 전반의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제전에 참가하고 또 이 경제전에 선전하여야 할 것은 오늘의 전시 하에 처한 과제가 되고 의무가 된다”고 주장했다(1938. 8. 21). 《조선일보》도 “일반 국민이 철저히 각오치 아니하여서는 안될 것은 장기전에 있어서 최후 승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력의 충실을 도(圖)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의 일본 제국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서도 더욱더욱 경제력의 축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938. 8. 22).

지나사변의 발발 이래로 총후 국민의 적성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다. 혹은 국방헌금으로 혹은 비행기의 헌납으로 혹은 위문품과 위문사절의 파송으로 혹은 백의 용사들의 위안으로 혹은 출정장사 가족의 부호(扶護)와 위안으로 혹은 전몰장사영령의 조의로 혹은 신사불전에 기원으로 각양각색으로 다 이 적성의 표현이 아님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못하고 따라서 성심성의가 12분 실천과 궁행으로 표현되지 못한 감도

23) 《동아일보》의 경우 “총후보국의 강조”(1938. 4. 26), “재경 정책의 대전환”(1938. 6. 24), “경제전 강조주간 실시”(1938. 8. 21) 등이 관련 사설들이고, 《조선일보》의 경우 “총후보국 강조주간”(1938. 4. 26), “물자동원계획”(1938. 6. 25), “경제전 강조주간에 임하여”(1938. 8. 22) 등이 관련 사설들이다. 이런 사설들의 게재는 언론기관을 적극적으로 선전도구화 하고자 했던 일제의 언론 통제가 작용한 결과였다(李鍊, 2002, 390~391쪽).

없지 않다(《조선일보》, 1938년 10월 6일자).

위의 주장처럼 조선인의 전쟁 협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여전히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무한 3진 함락 이후에도 이를 “일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군사행동은 소모 장기전에 대비 하여 경제전으로의 신등장을 보게 된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동아일보》, 1938년 10월 30일자) ‘경제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39년에 들어서서 전쟁 협력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된다. 특히 “일본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사설에 담겨 있었다.²⁴⁾ 그 예로서 《조선일보》는 “일본정신의 발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모름지기 일본국민은 이 기회에 일단의 정신 진작으로써 동아인질서 건설에 매진할 각오를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939. 2. 8). 《동아일보》도 “국민은 정신을 총휘(總揮)하고 국가의 총력을 겸발(兼發)하여서 일의매진(一意邁進), 사변 목적 달성을 필기(必期)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39. 4. 29). 나아가 《조선일보》는 “사상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학교에 있어서의 스파르타 교육도 일종의 사상전의 연장으로서의 사상교육”인 만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상적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1939. 6. 24).

1939년 여름에 가뭄이 극심해 식량문제가 대두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일제는 연말에 “경제전강조월간”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현대전의 특질이 경제전에 있고, 이 경제전을 수행함에는 물자동원이 철저”하여야 한다고 하며, “사변 목적 달성”을 위해 “물자절약, 물자활용, 절미절약, 생활쇄신, 저축장려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39. 12. 2). 《조선일보》도 “현대의 전쟁에 있어서 병력전 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전”이라고 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24) 이런 사설로는 《동아일보》의 경우 “정신발양 주간”(1939. 2. 8), “육군기념일”(1939. 3. 10), “봉축천장가절”(1939. 4. 29), 《조선일보》의 경우 “일본정신 발양 주간 실시”(1939. 2. 8), “기원절”(1939. 2. 11), “육군기념일에 제하여”(1939. 3. 10), “봉축천장절”(1939. 4. 29) 등을 들 수 있다.

가정경제를 위해서도 지극히 긴요한 항목”들이니 만큼 “국민이 항상 각기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39. 12. 1). 나아가 《조선일보》는 “시난(時難) 극복의 의식하에 그릇된 관념은 청산하고 경제전사로서 승리를 기(期)코 국채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939. 12. 30). 두 신문은 조선인들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경제전’을 위해 요구하는 항목들이 단순히 국가의 필요 때문만이 아니고 개인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1940년에 들어서서 《조선일보》는 “흥아성업(興亞聖業)이 중도에 있는 것을 명기하여 불퇴전, 불요절의 굳은 결심으로 용성매진치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940. 2. 11) 또한 《동아일보》도 “현하 동아 신질서 운동은 제국 미증유의 대업으로 그 달성을 위하여는 전국민의 이상한 결의와 국가총력의 전면적 지구적 발양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940. 3. 10). 3차 고노에 내각이 출범한 직후 《조선일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을 촉구하며 “민주주의, 개인주의를 청산하고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정신을 주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1940. 7. 25), 또 다시 “강력주의, 집단주의 이것이 전체주의요, 국가주의요 현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다. 조선청년들도 시대적 사조에 눈을 떠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940. 8. 10). 전쟁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논조로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내선일체론에 근거한 황민화 정책을 실시하고, 병참기지론에 기반하는 전쟁동원체제의 구축을 서둘렀다. 중일전쟁을 위해서는 조선인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황민화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황민화와 전쟁동원을 위해

서는 끊임없이 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해야만 했다. 이런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해 두 신문은 거의 그대로 순응하는 논조를 보였고, 지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반대 또는 침묵을 보였을 뿐이었다.

우선 전쟁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사실의 내용을 보면, 중일전쟁 발발 직후 한 동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전쟁의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고 일본은 부득이하게 동양의 평화를 위해 전쟁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침략해 놓고는 동양의 평화를 내세워야 했던 일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두 신문은 일본군의 승전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를 사실로 크게 다루었다. 조선인으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키고 나아가 일본의 국위에 압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한 3진이 함락된 1938년 말 이후 두 신문은 중일전쟁은 서구로부터 동양을 해방시켜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쟁이고, 일본은 그 해방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40년에 들어서면 《조선일보》는 중일전쟁이 ‘백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제 일본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주의가 논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황민화 정책에 관한 사실을 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초기에는 주로 신사참배나 궁성요배에 대해 이를 권유하거나 정당화하는 논조를 보였다. 두 신문 모두 1938년 3월에 공포된 3차 조선교육령과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논조를 보였다. 두 신문은 모두 지원병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며 절대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던 반면에 3차 조선교육령에 대해서는 조선어 교육의 폐지를 염려하며 소극적이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선어 교육 폐지가 지원병 제도 실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신문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어 신문으로서의 불안한 미래가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한 3진 함락 이후인 1939년에 들어서서 조선어 교육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이제 ‘일본 정신’을 강조하며 내선일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창씨개명에 대해 두 신문 모두 소극적이었던 것은 조선인들의 반발이

크고 아직 강제성이 덜 하던 초기 단계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동원에 관한 사설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한 동안 자중을 요구하는 논조만을 보이다가, 곧 여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두 신문은 거국일치하고 견인지구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매우 자주 주장했다. 1939년에 들어서서 전쟁 협력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된다. 특히 일본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사설에 담겨 있었다. 특히 경제전에 이어서 사상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동원을 위한 사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40년에 가서 《조선일보》는 이제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동원체제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제 말기 두 신문이 이렇듯 중일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왜곡하고, 항민화 정책 실시와 전쟁동원체제 구축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데는 분명 일제의 강력한 언론탄압이 작용했다. 일제의 언론통제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선전도구화 하려는 단계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 요인만으로 두 신문의 논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폭력을 통한 강제’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자발적 의식 전환’이나 경영진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판단 등 내부적 요인도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다. 먼저 동우회 사건이나 흥업구락부 사건을 통해 위축되어 있던 가운데 일제가 무한 3진까지 함락시키자 언론인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⁵⁾ 또한 경영진이 이미 전체적으로 민족운동이 괴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독자들의 민족의식도 이전과는

25) 중일전쟁 발발 직후 《조선일보》에서 친일적 논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주필 서춘에 반대했다고 하는(경성종로경찰서, 1938) 편집국장 김형원이 1938년 4월에 독립된 회사로 새로이 출범하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편집국장장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무한 3진이 함락된 이후인 1938년 말부터는 문인이기도 했던 많은 언론인들의 친일단체 참여나 친일적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달리 상당히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²⁶⁾

두 신문은 전쟁발발 초기부터 전쟁의 성격을 왜곡하며 황민화 정책과 전쟁동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를 보였다. 특히 1938년 말부터는 동양주의를 앞세우고 그 중심으로서의 일본을 강조하는 논조를 일관되게 보였다. 또한 그런 변화와 함께 일본정신의 수용을 통해 철저히 황민화할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전쟁동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외부적, 내부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난 이런 논조는 조선인들에게 황민화와 전쟁동원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반민족일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인 것이었다. 다만 두 신문이 조선어 교육 폐지와 창씨개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를 했거나 아니면 침묵한 것은 “평행제휴론”적인 내선일체론의 입장에서 적어도 완전한 “민족말살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두 신문이 일제 말기에 보여준 논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강요의 산물이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시대 추세를 읽고 대응한 것이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신문의 일제 말기의 논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친일 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친일의 계기와 논리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언론사 분야에서도 항일과 친일의 단순한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저항과 협력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런 연구과정에서 “민족주의에 의해 악의적으로 억압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극복되어야 하지만(박수연, 2003, 58~60쪽), 저항과 협력의 복합적 과정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도 ‘민족주의적’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용하

26) 일제 말기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변은진(1998)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식인·자본가·관료 등의 경우 변화된 현실 속에 일제의 선전을 상당 부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하의 독자들이 높은 경제·교육 수준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바로 독자들의 민족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김영희, 2001).

다. 저항과 협력의 복합적 과정을 파악한다는 것이, 항일과 친일의 단순 구도를 넘어서서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자는 것이지 결코 친일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민환 (1994). 일제시대 민족지의 사회사상. 『언론과 사회』, 제4호, 6~26.
-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민족문화사 연구』, 124호, 126~158.
- 김승환 (2004). 친일문학의 자발성에 대하여. 『실천문학』, 74권, 420~436.
- 김영희 (2001). 일제 지배시기 한국인의 신문접촉 경향.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39~71.
- 김재용 (2002a).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65권, 160~185.
- _____ (2002b).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친일문학. 『실천문학』, 66권, 51~76.
- _____ (2003). 멸사봉공으로서의 친일파시즘 문학. 『실천문학』, 69권, 394~412.
- 노용무 (2002). 친일시와 식민담론. 『국어교육』, 109호, 445~469.
- 류보선 (2003). 친일문학의 역사철학적 맥락. 『한국 근대문학 연구』, 7호, 8~40.
-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서울: 선인.
- 박수연 (2003). 내재성 부재의 주체와 문학적 종착지.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서울: 역락, 51~83.
- 박용규 (2002).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194~228.
- 변은진 (1998).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중연 (2003). 『황국신민의 시대』. 서울: 해안.
- 장용경 (2003). 일제 식민지기 인정식의 전향론. 『한국사론』, 49집, 231~

290.

- 정주수 (2003). 『창씨개명연구』. 서울: 동문.
최민지 (1978). 『일제하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최영태 (2004). 조선일보 폐간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 『역사비평』, 66호, 216~241.
최유리 (1997).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최 준 (1993). 『한국신문사』신보 중판. 서울: 일조각.
하정일 (2003). 한국 근대문학 연구와 탈식민. 『민족문학사 연구』, 23집, 10~36
한도연·김재용 (2003). 친일문학과 근대성.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서울: 역락, 33~49.

- 京城鐘路警察署 (1938). 朝鮮日報社ノ非國民的行爲.
宮田節子 (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이영남 옮김 (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서울: 일조각.
李 鍊 (2002). 朝鮮言論統制史. 東京: 信山社.
朝鮮總督府警務局 (1940). 『朝鮮出版警察概要』1939年版.
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朝鮮出版警察概要』1940年版.

- Bell, A. & Garrett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옮김 (2004).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Robinson, M.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25*. 김민환 옮김 (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서울: 나남.
Shin, G. W. & Robinson, M. (1999). Rethinking Colonial Korea. In G. W. Shin & M. Robinson(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18.

(최초 투고 2004.12.01., 최종원고 제출일 2005.01.05.)

The Change of Korean Newspaper Editorials on the Ruling Policies of Imperialist Japan in Colonial Korea Focused o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Yong-Gyu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edia & Culture, Sangji University)

Most of studies on the pres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newspapers in 1920s. These past studies didn't examine the whole process of change of the pres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Thus,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tenor of Korean newspaper editorials on the ruling policies during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as a part of attempts exceeding the limit of past studies.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37, the Korean newspapers were full of stereotyped editorials resembling in a way official gazette. Dong-A Ilbo and Cho-Sun Ilbo represented the purpose of the war was to emancipate Asian countries from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and to establish the peace of the Asia. Simultaneously, two newspap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ssimilating the Korean people into the Japanese and mobilizing them to the war. The tenor of these editorials was affected by intensified control over the press and the change of the consciousness of journalists. In conclusion, these newspapers had a harmful influence on the Korean people as a weapon to the movement to organize and mobilize them. Therefore the interest for researching on the pro-Japanese press should be taken in view of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Keywords: Chinese-Japanese War, Dong-A Ilbo, Cho-Sun ILbo, Press control, Pro-Japanese